

광주 '학교자치 조례' 전국 첫 제정

주민 청구 발의 조례안 시의회 진통 끝 처리

학생회·교사회 등 구성…‘교장권’과 갈등 우려

광주에서 전국 최초로 ‘학교자치조례’가 제정됐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31일 제2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전국에서 처음 주민청구로 발의된 ‘광주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에서는 조례안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와 함께 의결보류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으나, 결국 표결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주민 1만 7981명의 청구로 발의된 학교자치조례는 7개월여만에 제정됐다. 조례는 학생·학부모·교사·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보장해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 실현과 참여와 소통, 배움과 성장을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학교에서는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직원회 등 4개의 자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또 학교

규칙 제·개정, 교육계획, 교육과정, 예·결산 등 학교 운영과 교육 전반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무회의’를 두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학교장이 인사위원회 결정과 다르게 인사를 할 때는 교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한 조항도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로 수정했다.

교장의 교사회 참여 여부는 당초대로 배제된 반면, 행정실장의 직원회 배제 조항은 삭제됐다. 학교시설 이용이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 교사의 교권보장 등 상위법과 충돌되는 조항들은 대부

분 삭제됐다. 이 조례는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두고,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뒀다.

그러나 조례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광주 지역 교육 사회단체 10곳으로 구성된 ‘학교자치조례(안) 폐기 촉구를 위한 시민연대’는 “자치를 명분으로 기존의 학교운영위와 학교장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인사·예산 등에서 당사자들이 관여하면 학교운영의 혼란과 갈등을 우려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입게 된다”고 반발했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부터 징병검사

희망 날짜 선택하세요

오늘 날씨

해롭 07시 32분 해침 18시 01분

달롭 23시 13분 달침 09시 58분

우산 준비하세요

흐리고 비 오다가 오후 늦게 그쳐졌다.

광주 목포 여수 나주 완도 구례 강진 해남 장흥 순천 영광 진도 전주 군산 남원 혼천도

흐리고 비 11/13℃
흐리고 비 10/13℃
흐리고 비 11/13℃
흐리고 비 11/14℃
흐리고 비 11/13℃
흐리고 비 9/12℃
흐리고 비 10/13℃
흐리고 비 12/14℃
흐리고 비 10/13℃
흐리고 비 9/12℃
흐리고 비 11/13℃
흐리고 비 12/14℃
흐리고 비 10/13℃
흐리고 비 8/11℃
흐리고 비 9/12℃
흐리고 비 10/12℃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출증지수
서해 남부 일비단 남동~남서 1.5~2.5m 2.0~3.0m 관심 1 높음 보통

남해 서부 일비단 남동~남 2.0~3.0m 2.0~4.0m 관심 높음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일비단 서~북서 1.0~2.0m 2.5~3.5m 목포 05:17 10:28
남해 서부 일비단 서~북서 2.0~3.0m 2.0~4.0m 여수 17:35 22:51
남해 서부 일비단 남서~서 2.0~3.0m 여수 12:16 05:57
남해 서부 일비단 남서~서 2.0~4.0m 18:1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토) 3(일) 4(월) 5(화) 6(수) 7(목)
날씨 ☀ ☀ ☀ ☀ ☀ ☀ ☀
최저/최고 2/6 -2/6 4/7 0/5 -1/5 -5/0



설 대목 앞둔 제수용 과일

설을 앞둔 지난 31일 오전 광주시 서구 풍암동 서부농산물 시장 청과물동에서 아침부터 도매인들이 품질 좋은 과일을 열심히 고르고 있다.

법원, 군 공항 소음 ‘85웨클 이상’ 보상 판결에

“형평성 어긋난다” 주민 반발

한 재의결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사실왜곡 및 택시업계 분열 유도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에서 운행중인 택시 1만여대 이상이 직·간접으로 운행 중단에 나설 예정이어서 극심한 불편이 예상된다. 호남권에서 운행중인 택시는 광주 8000여대를 비롯해 3만여대에 이른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은 택시 운행중 단으로 시·도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택시 부제를 해제하는 한편 버스 증회 운행, 공공기관 보유 차량 투입 등 대책을 마련했다.

또 “국회에는 대중교통법의 신속

도심에 속하는 광주 군(軍) 공항 소음피해를 놓고 ‘85웨클 이상’ 소음에 한해서만 보상하도록 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31일 광주 제1 전투비행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 요구 결심공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은 “형평성도 없고 판결 기준의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009년 1심에서 내린 ‘80웨클 이상’에 거주하는 1만 3900명에게 216 억 원을 피해보상 하라’는 판결내용을 뒤집어 ‘85웨클 이상’ 지역주민 9673명에게 200억 원을 피해 보상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책위는 법원과 국가가 도시는 인구가 많아서 보상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 간 차별적인 피해보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대도시인 대구와 수원

공항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 그대로”라며 “법원은 강릉, 청주, 예천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80웨클 이상이면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고 덧붙였다.

/기원태기자 wtkee@

경미한 사안·당사자간 화해때

‘학교폭력 대책위’ 안 열어도 된다

교과부, 세부 기준 행정예고

이번 고시안은 학폭위 개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기준을 정한 것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학생이 이를 학폭위에 회부하지 않고 해당 사설을 담임교사에게만 통보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동의를 받아 어린이나 치매환자 등의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당사자가 원하면 언제든 폐기할 수 있다.

경찰은 어린이의 지문과 사진을 미리 등록해 놓고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활용하는 사전등록제를 지난 31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문·사진 사전등록제는 보호자의

70만명에 달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

各種 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3개국 수출증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업선된 名人의 차만 납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人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